

총선 이후 이탈리아 정치·경제 리스크 분석

오태현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차 례 ●●●

1.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
2. 이탈리아 경제개혁안 및 정당정책
3. 이탈리아 총선 이후 정치·경제 전망

주요 내용 ●●●

- ▶ 2013년 2월 24~25일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모든 당이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연정구성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부상함.
 - 베르사니가 이끄는 민주당은 양원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당초 연정 파트너로 기대되었던 몬티 총리가 이끄는 중도연합이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여 연정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과 그릴로의 오성운동당이 크게 약진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함.
 - 자유국민당과 오성운동당이 약진한 데는 건축에 따른 조세부담 증대 및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 2011년 11월 몬티 총리 취임 이후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혁안이 통과되었는데, 주로 재정건전화 및 경제성장, 경쟁력 제고방안이 제시됨.
 -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장기간의 저성장 및 낮은 경쟁력, 지역간 경제격차는 물론 높은 국가채무 수준과 지하경제에 따른 세수누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이탈리아가 재정위기국이 된 근원으로 지적됨.
- ▶ 이탈리아 총선 결과로 인해 이탈리아의 개혁의지가 다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정시한인 오는 3월 15일까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탈리아 경제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선 민주당과 자유국민당이 연정구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 이견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연정구성 실패 시 재선거 실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탈리아 리스크가 그리스의 경우와 같이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 낮으나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치적 결정에 따라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함.

1.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

가. 총선(2013년 2월 24~25일) 결과

-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베르사니(Pier Luigi Bersani)가 이끄는 중도좌파연합이 최다 득표율을 확보하였으나, 상원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함에 따라 이탈리아발(發) 정치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됨.
- 이탈리아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어 양원에서 모두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음.
 - 상원과 하원 모두 조각 승인권, 내각불신임권, 법률 통과권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원에서 모두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출범이 원칙적으로 어려움.

표 1. 정당별 의석 수의 변화

정치성향 및 주요 정당인	정당명	획득 의석 수			
		하원		상원	
중도우파연합 (베를루스코니)	자유국민당(PdL)	98	125 (29.18%)	99	117 (30.71%)
	북부연맹(LN)	18		17	
	기타	9		1	
중도좌파연합 (베르사니)	민주당(PD)	297	345 (29.54%)	113	123 (31.63%)
	좌파생태자유당(SEL)	37		7	
	기타	11		3	
중도연합 (몬티)	시민의선택(CC)	37	47 (10.56%)	18	19 (9.13%)
	기타	10		1	
그릴로	오성운동당(M5S)	109 (25.55%)		54 (23.79%)	
기타 정당		4		2	
합계(의석수)		630		315	

주: () 안은 득표율 비중을 의미.

자료: Italian Ministry of Interior.

- 중도좌파연합의 민주당(PD), 중도우파연합의 자유국민당(PdL), 오성운동당(M5S)이 득표율에서 상위 3위를 차지한 것과 달리 기대를 모았던 중도연합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함.
 - 당초 베르사니가 이끄는 중도좌파연합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거나 몬티(Mario Monti) 총리가 이끄는 중도연합과 함께 과반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총선 결과 상원에서 123석, 하원에서 345석을 얻는 데 그치며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
 -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막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5~7%로 줄이면서 중도우파연합은 상원에서 117석, 하원에서 125석을 확보함.
 -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이라 할 수 있는 그릴로(Beppe Grillo)의 오성운동당은 상원에서 54석, 하원에서 109석을 확보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함.
 - 반면, 몬티 총리가 이끄는 중도연합은 상원에서 19석, 하원에서 4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당초 연정구성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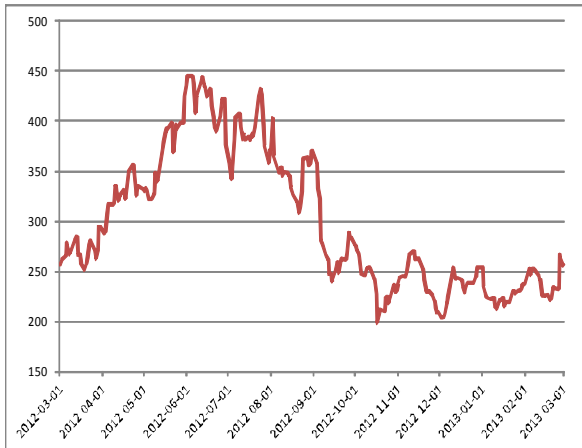
나. 총선결과 분석 및 유럽 정치권·금융권의 반응

- (개혁피로 및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 이탈리아 국민들은 긴축에 따른 조세부담 증대 및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자유국민당과 오성운동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됨.
 - 긴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경제가 뚜렷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긴축에 대한 피로감이 이번 총선을 통해 표출됨.
 - 중도좌파연합을 이끄는 민주당은 이전에 몬티 총리가 추진했던 개혁정책 추진을 약속한 반면, 자유국민당과 오성운동당은 반긴축·반유럽연합 정서를 표방하고 있음.
 - 자유국민당: 몬티 총리가 도입한 재산세(IMU) 폐지 및 탈세자 사면을 공약으로 제시
 - 오성운동당: 인터넷 무료 이용, 주 20시간 근로 같은 포퓰리즘적 공약을 제시
 - 중도연합: 몬티 총리가 이끄는 중도연합은 지속적인 긴축재정 및 구조개혁을 약속
 - 특히 이번 총선에서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당의 약진은 민주당과 자유국민당에 적잖은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오성운동당은 포퓰리즘적 정책공약 및 반정치적 행보로 인해 같은 정치권은 물론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으나 이탈리아 국민들이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오성운동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오성운동당은 이탈리아 기존 정치권의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또한 특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공약만을 앞세움.
- (독특한 선거제도)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다수득표당 프리미엄 비례대표제(un sistema proporzionale con premio di maggioranza)'라는 독특한 선거제도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전체 630석의 하원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데, 이탈리아 국외지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이 선출하는 12석과 발레다오스타(Valle d' Aosta) 지역에 할당된 1석을 제외한 총 617석이 득표율에 따라 배분됨.
 - 단 최다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경우에도 최소 340석이 할당됨.
 - 반면 상원에서는 지역별(20개) 최다득표 정당에 의석의 55%를 배분하는 등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됨.
 - 롬바르디아, 베네토, 시칠리아에 할당된 의석수는 각각 49석, 24석, 25석으로 전체 315석의 약 31%를 차지하며, 미국의 오키오와 플로리다, 버지니아 주처럼 상원선거에서 결과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역으로 평가받음.
 - 이번 상원 선거에서도 중도우파연합은 전체 득표율에서 밀렸으나,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시칠리아에서 중도좌파 연합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중도좌파연합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고) 당초 기대와 달리 친(親)긴축 성향의 민주당과 중도연합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주요 유럽 증시는 물론 이탈리아의 주요 금융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보임.
 - 총선 결과 발표 직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유럽 증시는 불안감 확산에 따라 하락세를 기록함.
 - 이탈리아의 주가지수(FTSE MIB)는 총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2월 26일 전일대비 4.9% 하락한 1만 5,604를 기록했으며, 유로스톡스 50지수(-3.1%), 독일 DAX30지수(-2.3%), 프랑스 CAC40지수(-2.7%), 스페인의

IBEX 35지수(-3.2%) 모두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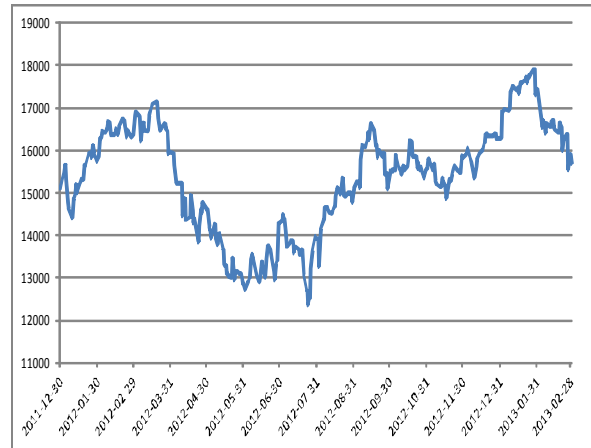
- 특히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과 CDS 프리미엄, 금리스프레드가 다시 악화됨.
 -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월 15일 1년 내 최저인 4.382%에서 총선 직후인 26일 4.897%로 하루만에 40bp나 상승했으며, 독일국채와의 금리스프레드 또한 300 이상으로 치솟음.

그림 1. 이탈리아 CDS 프리미엄



자료: Datastream.

그림 2. 이탈리아 주가지수(FTSEMIB)



자료: Datastream.

- (EU 정치권의 우려 확산)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두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며,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가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경계함.
-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가 지속적인 구조개혁 및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반롬퐁피(Herman Van Rompuy) EU 상임의장은 지속적인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탈리아는 정권에 상관없이 긴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 독일의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재무장관은 이탈리아의 선거결과가 유로존의 혼란 위험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조속한 정부구성을 촉구함.
- 한편 재정위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가 긴축정책 추진에 대한 자국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금융지표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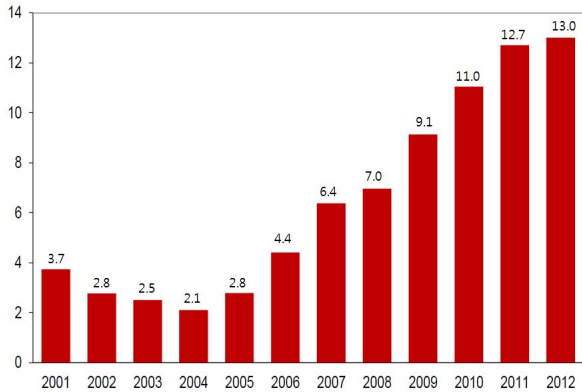
2. 이탈리아 경제개혁안 및 정당정책

가. 추진 중인 경제개혁안

- 몬티 총리가 2011년 11월 베를루스코니에 이어 신임 총리로 임명된 뒤 세 차례에 걸친 이탈리아 경제개혁안이 통과되어 현재 이행되고 있음.
 - ‘Salva Italia(Save Italy, Law No 214/2011)’ : 2011년 12월에 통과된 경제개혁안으로 2012~14년 중 약 300억 유로 규모에 달함.
 - 20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과 1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구성됨.
 - 청년층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이탈리아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IMU)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시킴.
 - ‘Cresci Italia(Growth Italy, Decree Law No. 1/2012)’ : 동 개혁안은 경쟁력 및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에너지 분야 및 전문직종의 경쟁제고, 기업의 은행대출 지원 등이 포함됨.
 - ‘Semplifica Italia(Simplify Italy, Decree Law No. 2/2012)’ : 동 개혁안은 주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재정건전화) 이탈리아 정부는 2015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GDP 대비 평균 5% 흑자 수준으로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2015년 GDP 대비 119.1%로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조세제도 개선, 공공자산 매각 등의 계획을 수립함.
 - 이탈리아는 부동산 거품 정도, 국내저축률, 민간채무 등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높은 국가채무로 인해 금리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탈리아 재무부는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공공자산 매각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음.
 - * 건물(Building): 약 3,400억 유로 규모(GDP 대비 21.7%)이며, 전체 건물의 약 80%를 지방정부가 소유
 - * 토지: 약 300억 유로 규모(GDP 대비 1.9%)이며 지방정부가 약 82%를 소유
 -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 부가가치세 인상(21% → 22%), 재산세(IMU) 도입, 지역별 생산세(IRAP) 개선 등이 추진됨.
 - 조세회피나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집행인력이 보강되고, 1,000유로 이상 현금거래가 금지됨. 또한 개인자산세를 통해 레저용보트·개인전용기(private aircraft)·고급승용차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과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부문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규모를 10%까지 축소, 공공기관의 임대비 지출 동결 후 재협상 등의 방안이 추진됨.

그림 3. 이탈리아 탈세에 대한 집행강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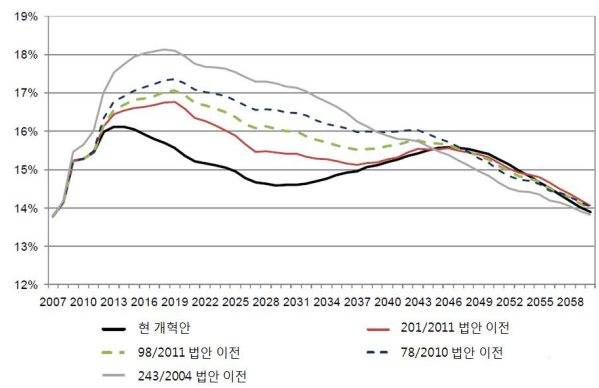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자료: Itali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그림 4. 연금개혁안 효과

(단위: GDP 대비 %)



자료: Itali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연금제도) 2011년 12월에 통과된 연금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최초 연금지급연령 연장, 연금지급을 위한 최소 납부연한 확대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됨.

– 새로운 연금제도 개혁안에 따른 연금지출 감소액이 2014년 76억 유로, 2020년에는 22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그림 4 참고).

○ 연금 최초지급연령은 남자의 경우 현 65세에서 66세로 연장되며, 여자의 경우 현 60세에서 62세로 연장됨.

– 연금액의 경우 퇴직 직전 일부 기간의 급여 대신 전체 근로기간의 급여를 근거로 산정됨.

■ (지방자치제도) 이탈리아는 20개의 주(Region), 110여 개의 현(Province), 8,000여 개의 자치도시(Municipality)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권한과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공공지출을 줄이는 데 이들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중요함.

– 현(Province)의 수를 74개로 줄이고,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에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법안이 제출됨.

– 또한 중복된 행정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임.

■ (노동시장) 고용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경직성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해고요건 완화, 청년고용 장려, 비정규직 고용제한 같은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안이 2012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됨.

– 현재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인 ‘부정한 행위’와 ‘입증된 경제적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해고에서 해석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고용주들의 부담을 경감시킴.

–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축소하는 대신 비정규직 고용기간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자들의 고용 유인을 제공함.

■ (서비스시장 개혁) 이탈리아 정부는 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통해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임.

나. 정당별 주요 정책입장

- (재정건전성) 모든 정당이 재정건전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도우파연합은 반(反)긴축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도좌파연합과 중도연합도 구체적인 방안 및 목표달성 시한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2. 정당별 재정건전화 방안

중도좌파연합	중도연합	중도우파연합
- 긴축재정 추진 및 2013년 균형재정 달성 - 유로본드의 발행 촉구 - 금융투자를 위한 재산처분계획 수립 - 공공재정 산출에 있어 연구, 인프라와 같은 분야의 투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EU에 촉구	- 2013년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달성 - 2015년까지 국가채무의 규모를 GDP 대비 60%로 감축 -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공공자산 매각	- 향후 5년간 국가채무 비중을 GDP 대비 100% 이하로 감축 - 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자산매각을 통해 4,000억 유로의 국가채무 감축 - 금융자산관리를 위해 스위스와의 조세 협정 체결

자료: 각종 언론 보도 필자 정리.

- (조세제도) 중도연합과 중도좌파연합이 조세부담 감축과 동시에 새로운 세금을 제시한 반면, 중도우파연합은 기존에 부과되던 세금의 폐지 및 조세부담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함.

표 3. 정당별 조세제도

중도좌파연합	중도연합	중도우파연합
- 개인소득세(IRPEF) 단순화하고 최저 세율을 23%에서 20%로 인하하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인상 - 자본소득에 대한 20% 세율 부과 - 금융거래세 도입	-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지출을 4%포인트 감축 - 2014년부터 중하위층을 대상으로 소득세(IRPEF) 및 지역생산세(IRAP) 부담 완화	-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 감축 -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IRAP 폐지 - 기업에 대한 재투자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폐지 - 조세제도 간소화 - SMEs, 예술가 및 자영업자들을 고려한 조세제도 마련

자료: 각종 언론보도 필자 정리.

- (의료제도)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도좌파연합은 정부개입을 강조한 반면, 중도연합은 제도개선을 제시함. 반면 중도우파연합은 의료비용 산정의 현실화를 제안함.

표 4. 정당별 의료제도

중도좌파연합	중도연합	중도우파연합
- 재정효율성 및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개입 강화 - 경제성장을 위한 한 축으로서 의료 산업 육성	- 의료폐기물 감축 적절한 치료원칙에 입각한 의료시스템 개선 - 홈케어시스템 강화	- 의료비용 산정을 위해 역사적 비용 대신 표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각종 언론 보도 필자 정리.

- (산업 및 비즈니스) 산업 및 비즈니스의 경쟁력 제고 및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세 정당연합 모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조세경감 등을 통한 재정지원에 집중됨.

표 5. 정당별 산업 및 비즈니스 정책

중도좌파연합	중도연합	중도우파연합
- 혁신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생산지원 - SME의 연구 및 국제화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연계 방안 강화 - 주요 투자, 연구 및 혁신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 공공기관의 민간부문 지원을 위한 국채발행 - 소규모 공공인프라 투자 지원 -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산업생태정책(ecological industry policy) 개발	- 조세감면을 통한 R&D 투자 확대 - 임금협상의 비집중화(decentralization) - 소규모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첫 5년 동안 기업의 부담금 감면 -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고용 및 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축으로 대체 - 수습계약기간 최대 4년 동안 세금경감 - 선창업 후행정규제 - 혁신 및 수출지원을 위한 합자회사(CDP: Cassa Depositi e Prestiti) 활용

자료: 각종 언론 보도 필자 정리.

- (EU와의 관계) 친EU 성향의 중도연합과 달리 중도우파연합의 베를루스코니는 건축 일변의 독일정책을 비판하며 EU와의 정치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음.

표 6. 정당별 EU와의 관계 및 대외정책

중도좌파연합	중도연합	중도우파연합
- 주요 EU 기구 수장의 직선제 도입과 점진적인 유럽통합 추진 - 저금리 국채발행을 위해 각국의 국가채무에 대한 EU 차원의 공공관리 - 차관금 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지원	- 재정건전화를 위한 성장친화적 정책 추진 - 재정규칙 준수 - EU 민주주의 제고	- 유럽중앙은행에 최종대부지(last resort) 역할 부여 - EU차원의 안보 및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될 유로본드 및 프로젝트 본드 발행 - EU 신용평가기관 설립 - EU 상임의장의 직선제 및 유럽의회 입법권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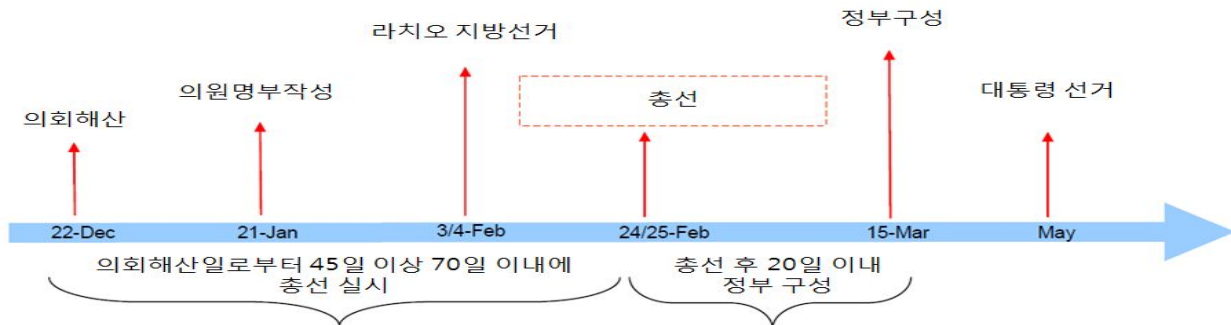
자료: 각종 언론 보도 필자 정리.

3. 이탈리아 총선 이후 정치·경제 전망

가. 총선 이후 정치 전망

- 총선 이후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도우파연합 및 중도좌파연합 모두 재선거에 부담을 갖고 있어 연정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 정당연합 모두 정책차이로 인해 연정구성이 쉽지 않은 만큼 연정구성 법정시한인 3월 15일까지 이탈리아 정치권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탈리아의 이번 총선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선거(No Winner, Only Loser)’로 평가됨.

그림 5. 이탈리아의 정치일정



자료: Morgan Stanley(2013).

- 총선 이후 크게 연정 구성과 재선거 실시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나, 연정 구성을 위한 정치세력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느 시나리오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우선적으로 연정구성이 추진되고, 이후 재선거 가능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오성운동당의 그릴로 당수는 연정구성에 원칙적으로 불참할 것을 선언함.
- 중도좌파의 베르사니와 중도우파의 베를루스코니는 재선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주요 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연정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베를루스코니와 베르사니 모두 재선거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이는 재선거가 오히려 오성운동당의 득표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근거함.
- 그러나 중도좌파연합, 중도우파연합, 중도연합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통해 총선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정책조율을 할 가능성 또한 상존함.
-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6월이나 7월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차기 연정 구성 및 재선거 여부와 상관없이 몬티 총리가 추진하던 개혁조치는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이 EU 내 정치적 분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이탈리아가 처한 정치·경제적 문제점은 미흡한 거버넌스 및 상호간 신뢰상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총선결과로 인해 몬티 총리 이전의 상황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함.
 - 베를루스코니 사임 후 몬티가 신임 총리로서 경제개혁을 주도했으며,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우려가 크게 완화된 것을 볼 때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중요함을 반증함.
- EU 집행위원회 및 독일 등은 이탈리아 총선으로 긴축과 성장이라는 재정위기 해법을 둘러싼 EU 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긴축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함.
 - EU 및 유로존의 전반적인 개혁방향은 독일이 주도하는 긴축과 재정준칙 강화로, 프랑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긴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총선결과가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긴축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총선 이후 경제 전망

- 연정구성이 실패하거나 재선거를 통해 긴축에 반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경우 국가채무 감축능력에 대한 불신제고와 함께 남유럽 재정위기국으로 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
- 이탈리아 총선 결과 발표 직후 상승한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이탈리아의 총선결과가 유럽 재정위기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증임(그림 6 참고).
 - 이탈리아 총선의 영향을 받아 스페인 10년만기 국채금리는 2월 22일 5.197에서 2월 26일 5.365%로 상승함.
- 이탈리아는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유럽안정화기구(ESM) 및 현재 추진 중인 은행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위기로 인해 EU 및 유로존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유럽안정화기구에서 이탈리아의 기여규모는 전체의 17.9137%로 약 1,254억 유로를 차지하고 있어 이탈리아가 흔들릴 경우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 노력이 함께 위기에 처할 수 있음(표 7 참고).
 - 특히 자유국민당을 비롯한 오성운동당이 반유럽 연합정서를 나타내는 만큼 이들이 연정으로 참여할 경우 이탈리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그림 6.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금리스프레드

(단위: 독일 10년 만기 국채 대비 %포인트)



자료: Bloomberg.

표 7. ESM 상위 5개국의 기여비중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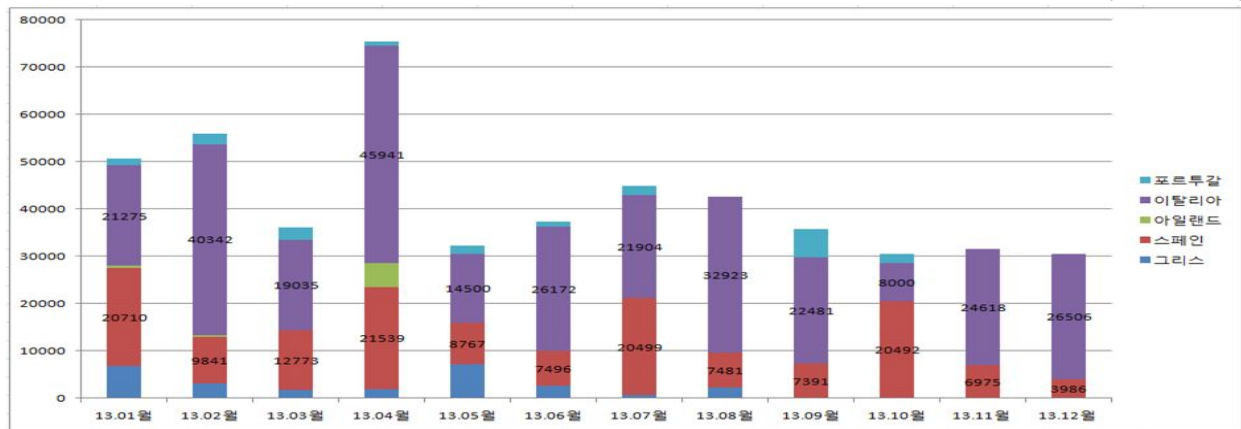
국가	비중	전체기여금	납입금
독일	27.1464	190,024.8	21,717.1
프랑스	20.3859	142,701.3	16,308.7
이탈리아	17.9137	125,395.9	14,331.0
스페인	11.9037	83,325.9	9,523.0
네덜란드	5.7170	40,019.0	4,573.6
기타	16.9333	118,533.1	13,546.6
합계	100	700,000.0	80,000.0

자료: European Commission.

-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탈리아가 제2의 그리스가 되어 유럽 재정위기 및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총선결과를 두고 이탈리아가 2012년 5~6월의 그리스와 같은 정치·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는 적으나, 정치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킬 가능성은 상존함.
 - 오성운동당의 그릴로는 이탈리아의 부채탕감이 불가능할 경우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음.

그림 7.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2013년 월별 만기채권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자료: Bloomberg.

- 2013년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국채규모를 고려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이 이탈리아의 채무상환 또는 신규 국채발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탈리아의 선풍은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

부록. 재정위기 속 이탈리아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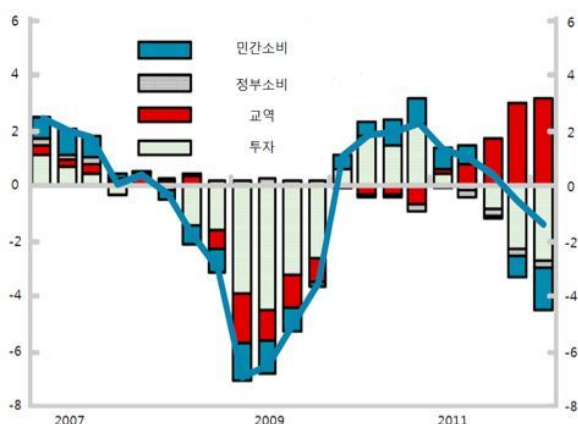
- 이탈리아는 유럽 재정위기 초부터 재정위기국(일명 PIIGS)으로 분류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저성장·낮은 경쟁력 및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됨.

1) 저성장·낮은 경쟁력

- (낮은 경제성장률) 이탈리아는 1990년대 이후 1% 미만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1990~2012년 중 이탈리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8%로 EU의 평균 경제성장률(1.8%)을 크게 하회하며,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1999년 이후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더라도 이탈리아는 0.7%를 기록한 반면, EU는 2.4%를 기록함.
 -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탈리아 경제는 2009년 -5.5%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0년과 2011년 1.8%와 0.4%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2012년 다시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도 경기침체를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이탈리아는 2011년 3/4분기 -0.2%의 경제성장률을 시작으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임.
 - 교역부문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 정부소비 및 투자가 모두 위축되며 경기침체가 지속됨.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 회복에 중요한 민간소비와 투자가 단기적으로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질 것임.
 - 이탈리아의 제조업은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SMEs)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정위기 기간 중 신용경색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축소 및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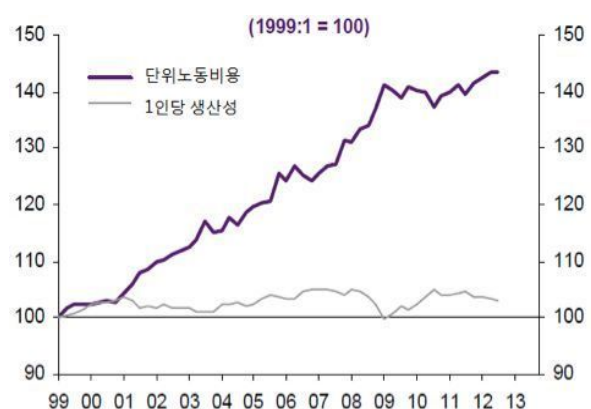
부록 그림 1. 이탈리아 부문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단위: %p)



자료: IMF(2012); Oxford Economics(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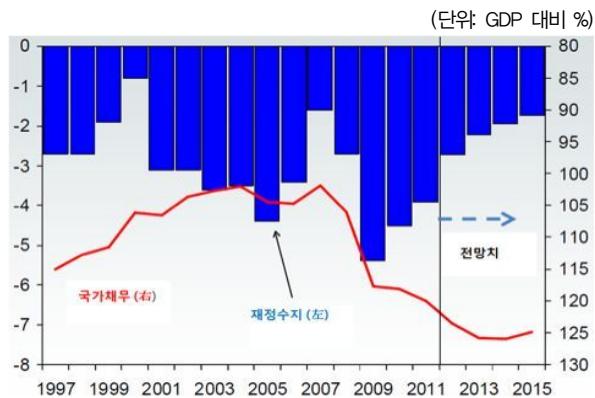
부록 그림 2. 단위노동임금 및 1인당 생산성



자료: Itali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낮은 경쟁력)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단위노동임금 증가는 이탈리아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수출경쟁력 또한 위협을 받으며 세계시장에서 이탈리아의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부록 그림 2 참고).
- 2012년 발표된 EU 집행위의 *Alert Mechanism Report*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기는 가운데 2011년 기준 최근 5년간 이탈리아의 시장점유율은 19% 가까이 하락하며, 8.3% 하락한 독일보다 큰 하락폭을 기록함.
 - 이탈리아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인 섬유, 의류, 피혁, 가구 등은 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왔으나, 동 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됨.
- 낮은 경쟁력의 원인 중 하나는 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바, 고등교육을 받은 이탈리아의 인구 비중은 2011년 기준 13.1%로 영국(33.3%) 및 EU(23.6%)의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 (높은 국가채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높은 국가채무는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이탈리아 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됨.
- 이탈리아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한 당시 재정적자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지속된 높은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위기국으로 분류됨.
 - 이탈리아의 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5.4%와 -4.5%로 독일(-3.1%, -4.1%)보다는 높았으나, 아일랜드(-13.9%, -30.9%), 그리스(-15.6%, -10.7%), 스페인(-11.2%, -9.7%)과 비교해서는 매우 양호함.
 - 국가채무는 GDP의 평균 110%를 꾸준히 상회하여 국제자본시장의 금리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보임.

부록 그림 3. 이탈리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자료: KIEP(2012).

부록 표 1. OECD 주요국의 지하경제 비중

(단위: 2009년 기준, GDP 대비 %)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그리스	25.0	캐나다	12.6
이탈리아	22.0	아일랜드	13.1
스페인	19.5	프랑스	11.6
포르투갈	19.5	영국	10.9
독일	14.6	일본	9.5
덴마크	14.3	미국	7.6
OECD 21개국 평균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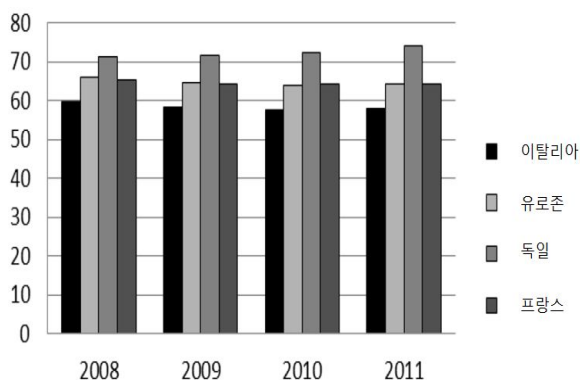
자료: Schneider(2009).

- (높은 지하경제 비중)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조세집행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이탈리아의 지하경제 비중은 GDP 대비 22%로 그리스(25%)와 함께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임(부록 표 1 참고).
-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은 결국 구조적인 세수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탈리아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실정임.

-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이중성) 이탈리아의 경직성은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낮은 보호수준으로 다양한 고용계약에 따른 양극화된 노동시장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탈리아의 고용보호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면을 살펴보면 정규직에 대한 높은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한 양극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이어지고 있는바,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2013년 1월 기준 11.9%로 상위 10위인 것에 비해 청년실업률(38.7%)은 그리스(2012년 11월 기준 59.4%), 스페인(55.5%) 다음으로 높음.
- 한편 고용률은 낮은 경제성장률 및 기업투자를 반영하듯이, 정부의 고용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부록 그림 4 참고).
 - 이탈리아의 고용률은 60% 미만으로 유로존 평균은 물론 주요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고용률을 하회함.

부록 그림 4. 유럽 주요국의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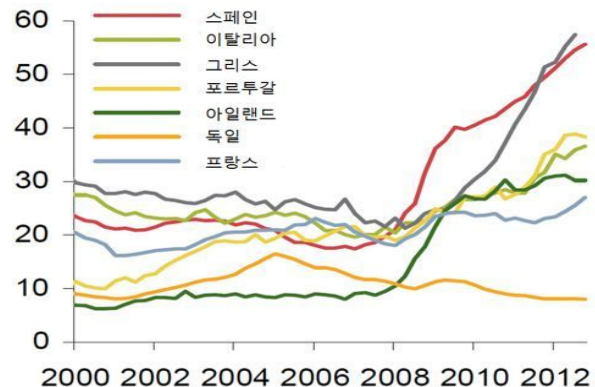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U 통계청.

부록 그림 5. 유럽 주요국 청년실업률

(단위: %)



자료: EU 통계청.

2) 지역간 경제불균형

- 전통적으로 부유한 북부지역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남부지역의 경제력 차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북부와 남부의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북부는 EU 평균의 110~150%인 반면, 남부는 65~85%에 불과하며, 반면 실업률은 북부가 5~6%인 반면, 남부는 12~15%를 기록하고 있어 대조적임(부록 표 2 참고).
 -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제조업 산업기반이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부지역에서는 주로 공공서비스 및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Cassa per il Mezzogiorno(남부개발기금)'로 불리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1950년 이후 추진하고 있으나, 남북간 경제력 차이는 해소되지 않았음.
 - 이 프로젝트는 공공인프라 건설을 통해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음.

부록 표 2. 이탈리아의 남북경제력 비교

지역	EU 평균 1인당 GDP 대비	실업률	NPL
Basilicata	75%	12%	29%
Calabria	68%	13%	27%
Sicily	68%	14%	23%
Campania	67%	15%	22%
Molise	84%	10%	26%
Sardinia	80%	13%	20%
Puglia	69%	13%	19%
Abruzzi	86%	9%	16%
Lazio	121%	9%	15%
Marche	105%	7%	15%
Umbria	96%	7%	15%
Tuscany	114%	7%	14%
Piedmont	111%	7%	11%
Emilia	127%	5%	11%
Veneto	120%	5%	11%
Liguria	111%	6%	10%
Friuli	116%	5%	11%
Lombardy	133%	6%	9%
Valle d'Aosta	133%	5%	8%
Trentino	148%	4%	6%

자료: RBS(2013).

